

프랑스 사회모델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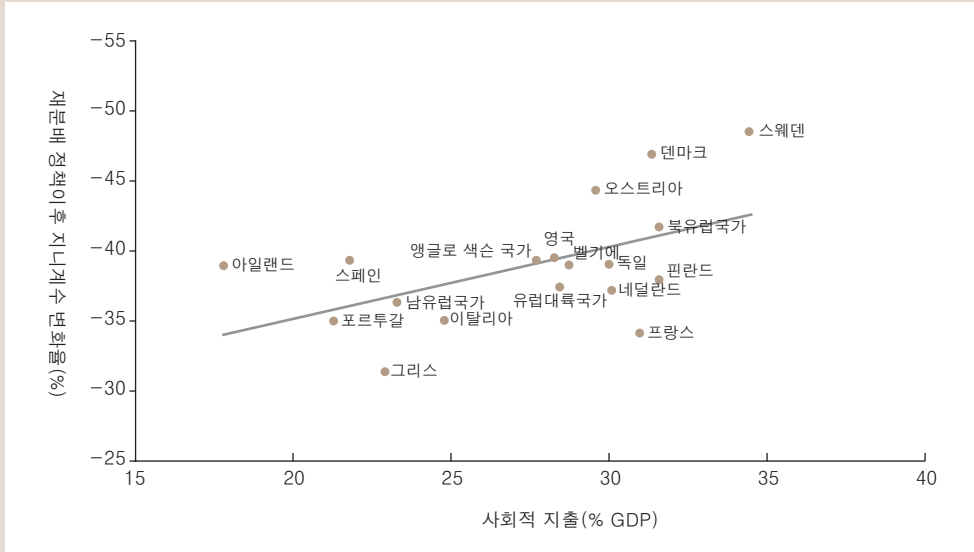
김영용 (프랑스 파리 13대학 박사후 연구원)

■ 프랑스 사회모델,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효율적인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지니계수를 사용한다(이 계수가 낮을수록 그 사회는 평등하다). 흔히 이야기되는 바대로 프랑스가 과연 평등한 나라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나라의 소득 지니계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륙 국가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전지출과 누진적 과세 수단을 활용하며 그 결과 이들 대륙국가들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정책 시행 후 지니계수가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보면 놀랍게도 프랑스는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불평등 감소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확인된다. 또한 프랑스는 앵글로색슨계 국가인 아일랜드나 영국보다도 성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인 지니계수의 차이와 지니계수 변화율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확실히 프랑스는 영국보다 지니계수가 더 낮지만 재분배정책을 통한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영국보다 더 작다. 향후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경쟁에서 언젠가는 영국이 프랑스를 추월할 것이다.

이러한 빈약한 프랑스 재분배정책의 성과는 프랑스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높은 사회지출을 수행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더 실망스러워진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과거 15년간 재분배와 사회적 통합을 중시하는 사회당 정부가 집권하였고 이 기간 동안 사회적 지출이 GDP의 8%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¹⁾ [그림 1]은 지

[그림 1] GDP 대비 사회적 지출과 재분배정책 이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자료 : Boeri(200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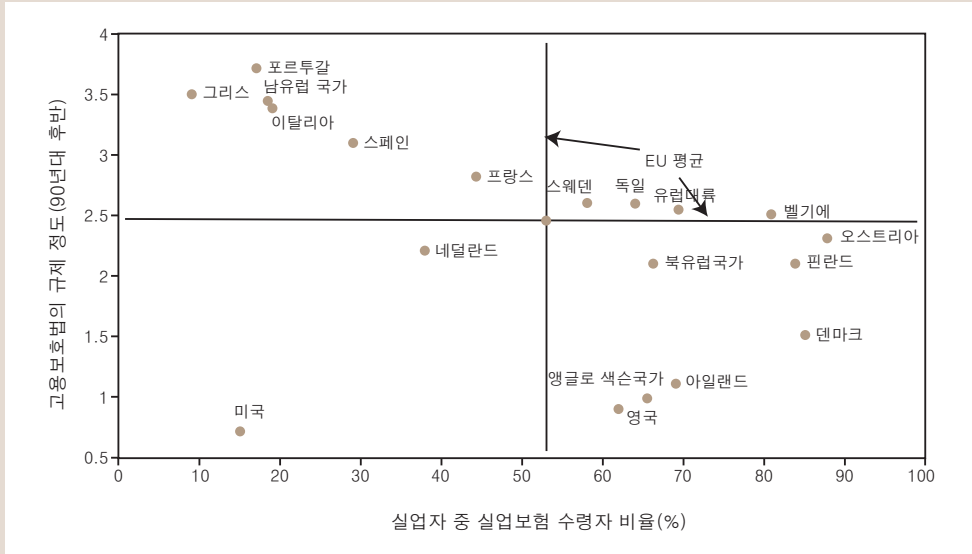
니계수의 변화율과 GDP 대비 사회적 지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에 의하면 프랑스의 재분배정책은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의 증대는 지니계수의 하락으로 표현되는 불평등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정형화된 사실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는 추세로부터 벗어난 특이치에 해당한다.)²⁾ 프랑스(FRA)는 포르투갈(PRT)보다 GDP의 훨씬 많은 비율을

1) 프랑스 정부 지출은 1980년 GDP의 46%에서 1998년에는 54%를 넘어섰다.

2) 이러한 차이는 경제학 원론 첫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곡선상에서의 이동”과 “곡선 그 자체의 이동” 사이의 구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프랑스는 사회지출 증가율과 불평등 감소율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열등한 또 다른 곡선 위에 위치해 있다.

[그림 2] 고용보호법률과 실업보험 사이의 관계



자료 : [그림 1]과 동일

사회지출로 돌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포르투갈만큼이나 저조하다.

재분배정책과 더불어 프랑스 사회모델이 평등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동시장 내에서의 고용보호 수준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있을지도 모를 노동시장에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 ① 고용보호법률을 제정한다. ② 실업보험을 운영한다. 전자가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고용을 보호하고 그 시행에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후자는 고용 노동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실업자들을 지원한다.

이 두 개의 고용보호 수단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존재한다. 이는 어느 하나의 수단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이상 다른 수단을 또 다시 그만큼 채택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혹은 어느 하나의 수단이 관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다른 서비스는 그럴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2]는 법률을 통한 고용보호 수준(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s: EPL)과 실업보

〈표 1〉 25세 미만 계절조정 실업률

(단위 %)

	2004/6	2004/12	2005/1	2005/2	2005/3	2005/4	2005/5	2005/6
유로-존 ³⁾	17,8	18,1	18,6	18,4	18,8	18,4	17,6	17,9
EU 25 ⁴⁾	18,5	18,6	18,8	18,7	18,9	18,7	18,2	18,4
프랑스	21,9	22,1	22,2	22,2	22,3	22,3	22,4	22,5

자료 : Eurostat.

현지급 범위(unemployment benefits: UB) 사이의 상충관계에서 각국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프랑스가 실업보험보다 고용보호법률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호는 그 정의상 이미 고용된 장년 노동자층에게만 주어지며, 또한 실업보험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 노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노동시장 고용보호정책들은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년 노동자들과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비대칭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용보호정책의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불리한 효과는 사실상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문제는 그 정도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확연히 더 심하다는 데 있다.

위의 <표 1>에 따르면 유로 - 존 국가들이나 EU 25개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반해 프랑스의 그것은 언제나 20%를 넘어선다. 한편 프랑스 청년 노동자층의 고용사정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아랍이나 아프리카 이민자 가계 출신의 청년 노동자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청년 노동자들 일반이 처해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상황에 더해 인종적 차별까지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이력서에 자신의 아랍 이름을 적어 기업에 보낼

3) 여기서 유로 - 존이란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를 지칭한다.

4) 반면 EU 25개국은 앞서의 유로-존 국가에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말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을 더한 것이다.

경우 입사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기업이 면접 이전에 벌써 이들을 탈락시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의 사회모델이 비록 불평등하다 할지라도 높은 효율성을 발휘한다면 이 사회모델은 최소한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할 나름의 근거를 가지는 셈이다. 앞서 살핀 대로 프랑스 사회모델이 불평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프랑스 사회모델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모델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만일 한 사회가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경제학자들은 이 사회를 파레토 비효율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 사회의 노동력이 모두 생산에 참가해서 그 사회가 자신의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상에 위치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은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과 거리가 먼 사회인데 프랑스 사회모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 현재 공식 실업률은 10.2%이며, 총실업 인구는 390만 명에 육박한다. 더군다나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역시 77만 8천 명에 달한다(Alternatives Economiques 2005, no. 238). 결국 프랑스는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체 실업률 수준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업률은 영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보다 더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과 같은 노르딕 국가보다 더 높다. 프랑스는 오직 지중해 국가인 이탈리아와 유사한 규모의 실업률을 갖는데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마저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인 데 반해 프랑스는 여전히 높은 실업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신규 회원국의 가입 덕분에 이제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 실업률 1위의 자리를 다른 나라(폴란드나 슬로바키아)에 내주었으나, 여전히 부동의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

한 사회의 노동력 고용과 관련한 효율성 정도는 비단 실업을 흡수하는 정도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가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그리스, 벨기에 등과 더불어 다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프랑스를 포함한 이들 국가들의 고용률은 리스본 정상 회담에서 2010년 목표치로 결정된 70%에 많이 밀리기 때문이다.

만일 한 사회 모델이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며(그 결과 사회적 통합이 달성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제공하고(그 결과 고용안정성이 증가한다), 노동시장 참가에 대해 더 큰 보상을 제공해 줄 때(그 결과 노동인센티브가 증가한다), 그 사회모델은 효율적이면서도 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프랑스 사회모델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모델은 불평등할 뿐 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까지 하다.

■ 프랑스 사회모델, 무엇이 문제인가

“프랑스 사회모델이 사실은 불평등하다”라는 점을 프랑스인들이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파리 북부지역 소요사태 직전에 출간된 <Alternative Economiques>지의 특집 주제는 “프랑스 사회모델의 위기(la crise du modèle français)”였으며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사회적 분열의 심화: 프랑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불평등하다(la fracture sociale s’approfondit: La France est beaucoup plus inégalitaire qu’ on ne le croit)”였다. 이 저널이 인용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특히 노동 빈민(travailleurs pauvres)의 문제가 심각하다. 임금 중앙값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용 노동자의 비율은 앵글로 색슨 국가인 아일랜드나 영국, 지중해 국가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에스파니아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르딕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대륙 국가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난다.

불평등한 프랑스 사회모델과 관련해 누군가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한 적이 있다(Fauroux: Le Boucher 2005); 파리 가르니에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는 아주 훌륭하다. 그렇다면 누가 이 경탄할 만한 오페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가? 먼저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이들은 가장 부유하면서도 결코 공연 관람에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무료 초대권을 받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페라 애호가들. 이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공연 관람 비용을 모두 들지 않는다. 그들 역시 공연 비용의 일부만 지불한다. 가장 부유한 사람의 관람비용 일체와 오페라 애호가들의 비용 일부는 국가재정에 의해 충당된다. 국가는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를 거두는데 프랑스의 조세 체계는 역진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사람들은 이 오페라를 ‘대중 오페라’ 라고 부른다. 오페라 공연 비용의 전가를 둘러싼 이 짙막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프랑스 사회모델 불평등의 비밀을 밝혀준다; “부유한 자들의 여가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약자를 간접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약탈하는 것이야말로 보수 세력의 기득권이다(Le Boucher, 2005).”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회모델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사회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이 존재해야만 한다(이들을 정치학자들은 헤게모니 블록 hegemony bloc 이라고 부른다). 사회모델 또한 이들 집단의 이해를 보장해야만 하는데 현재 프랑스에서는 성인인구의 60% 가량만이 이 집단에 속해 있다. 이들이 바로 무료로 오페라를 즐기는 (소수의) 부유층과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다수의) 오페라 애호가들이다.

이들은 해고의 위협 없이 평생직장을 보장받고 있으며 관대한 연금보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국인들보다 3배 내지 4배나 많은 유급휴가를 누리고 있다. 거기에는 주당 35시간 노동법 덕분에 임금 삭감 없이 1년에 180시간의 추가적 여가를 즐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 덕분에 가족수당을 받으며 3인 이상의 자녀가 있을 시에는 상당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자녀들은 훌륭한 설비와 인력으로 운영되는 데이케어 센터와 공공교육기관을 다닐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보장기구(“Secu”)의 지원으로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이웃들(성인인구의 나머지 40%)의 사정은 앞서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이들은 프랑스 사회모델로부터 매우 제한적인 사회적 급부만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로 실업상태에 놓여 있거나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2000년 현재 6천만 프랑스 전체 인구 가운데 450만 명이 빈민으로 공식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500만의 인구가 빈곤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그 대부분이 근로 빈곤층, 실업상태의 아프리카나 아랍계 이민자와 그 자녀들, 장애자들, 높은 집세와 낮은 소득에 직면한 젊은 부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프랑스 사회모델 저녁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프랑스에서 국가의 높은 사회적 지출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급부의 대부분은 헤게모니 블록 집단(앞서 언급한 성인인구의 60%)에게 집중된다. 이들 다수의 안락은 불운한 소수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다. 무엇보다도 연금 시스템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놀랍게도 공공부문과 관련된 전체 인구의

30%가 국가의 연간 연금비용의 60%를 가져가 버린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RATP(파리 버스 및 지하철 시스템)나 SNCF(프랑스 국철), 혹은 BOF(프랑스 국립은행)에 근무하였다면 그는 아주 관대한 연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RATP 연금의 경우 노동자가 매년 5억 유로를 내는 반면, 기업은 11억 유로를 낸다. 그러나 납세자가 그 나머지인 25억 유로를 지불한다.⁵⁾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이들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연대(solidaritaire)’라는 말을 독점 사용한다. 프랑스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의 파업이 빈번한데 이 때 노동자들이 내거는 슬로건 가운데에는 의례 ‘연대’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연대라는 말은 안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과 특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신들의 이웃에 대해 가지는 의무감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의 경우 이 말은 안락과 특권에 대한 추가적 보장(securité)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2005년 프랑스에서 연대라는 말은 공공기업 노동자의 지속적인 일자리 보장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급부의 증가를 의미한다. 프랑스 사회모델을 오랫동안 관찰한 한 외국인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프랑스의 ‘연대’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증언을 한 바 있다.

“마치 미국에서 공화당원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공공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RATP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이 사회적 연대라고 주장한다(Smith, 2005).”

■ 결론 : 앞으로 프랑스 사회모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추상적인 경제학 모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외부자와는 달리 현실의 외부자는 파리 북역에서 전차를 타고 5분만 가면 나오는 방류(banlieu)⁶⁾ 지역의 이웃들이다.

5) RATP 연금의 경우 1990년 말 2000년 초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버렸다.

6) 이는 도시 외곽이나 변두리를 지칭하는 불어이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배제 현상이 주목 받고 있다. 일부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집단들이 사회적 관계의 주류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여 있거나 낮은 직급의 임시 노동에 종사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 소비의 많은 부분을 정부의 이전지출로 충당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양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장기 수혜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 부모의 소득이나, 암시장, 혹은 범죄적 행위로 생계를 유지해 간다. 그들은 종종 대도시 외곽의 빈민 구역에 모여 사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서비스는 미약하며, 교육 정도는 형편없고, 치안은 빈약하다. 이들이야말로 사회의 진정한 외부자들이며 노동시장 내에서 그들의 외부자적 위치는 그들의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Lindbeck and Snower, 2002, 필자 강조).”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노동 빈민, 실업상태의 아프리카나 아랍계 이민자와 그 자녀들, 장애자들, 높은 집세와 낮은 소득에 직면한 젊은이들이야말로 프랑스 사회모델의 외부자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2명의 아랍계 소년들의 죽음으로 촉발된 파리 북부지역의 소요사태는 이들 외부자들의 누적된 분노가 일시적으로 분출된 경우이다.

만일 우리가 위기를 “구래의 것은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이행기적 상황”이라고 정의한다면,⁷⁾ 오늘날 프랑스 사회모델은 분명 그러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 ‘영광의 30년간(Trente Glorieuses)’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작동하였으며⁸⁾ 1970~80년대에는 그런대로 작동하였던 프랑스 사회모델은 1990년대 들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프랑스 사회모델이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으며 현재 대안적 사회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7) 이는 이탈리아의 사상가인 그람시(A. Gramsci)의 정의이다.

8) 프랑스의 경제학자 브와예(R. Boyer)에 따르면 프랑스는 과거 ‘포디즘의 우등생(Best Student of Fordism)’이었다.

앵글로 색슨 모델을 비켜가면서도 기존의 프랑스식 사회모델을 대신할 만한 대안적 사회모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과연 그런 것이 존재할까? 다행스럽게도 프랑스 앞에는 TINA(There Is No Alternative)식의 체념론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하나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구 사회 모델이다. 1980년대 이래 스웨덴 역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거대한 사회적 지출, 엄청나게 증가한 실업률, 국내 자본의 해외이전과 그로 인한 산업 공동화 등 현재 프랑스가 겪고 있는 모든 구조적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상상력과 기술적 창조력이 유별나게 뛰어난 스웨덴 인들은 앞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스웨덴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스웨덴은 사민주의 정치와 IT 기술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범적 사례로 칭송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스웨덴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평등한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대안적 사회모델을 찾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스웨덴식 사회모델은 ‘사회의 최약자를 방어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가장 보호받고 있는 자들을 지키는’ 프랑스식 조합주의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모델과는 달리, 시민 모두에게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국가(universalist welfare state) 모델에 기반해 있다. 후자의 경우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급부를 받지만 빈민들은 부유층이나 중산층보다 더 많은 급부를 받는다. 둘째, 스웨덴 사회모델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평등 혹은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통합이 결코 상호배제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스웨덴의 경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동시에 불평등 역시 낮다. 프랑스는 스웨덴만큼이나 사회적 지출이 높은 국가이지만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재분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출의 수준이 아니라 지출의 유형이다.

유럽의 미래를 위해 독일과 더불어 프랑스가 수행할 전략적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프랑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유럽이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 유럽(Market Europe)’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부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유럽이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에 대항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할 때 프랑스 사회모델의 미래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Alternatives Economiques (2005), “La Crise du modèle français”, No 238, Juillet–Aout.
- Amable, Bruno (2005), *Les cinq capitalismes: Diversité des systèmes économiques et sociaux dans la mondialisation*, Seuil.
- Barbier, Jean–Claude and Bruno Théret (2004), *Le Nouveau système français de protection sociale*, La Decouverte.
- Boeri, Tito (2002), “Let Social Policy Models Compete and Europe Will Win”, Working Paper.
- Bordonaro, Federico (2005), “In the Heart of Europe: Social Models and Geopolitics’”, <http://www.pinr.com>
- Embassy of France in US. (2005), “Press Conference Given by Jacques Chirac, President of the Republic, Following the Gleneagles G8, Excerpts, Gleneagles, July 8”, Standpoint n° 132.
- Esping–Anderso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isel, Richard F. (1981), *Capitalism and The State in Modern France: Renov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 Boucher, Eric (2005), “The Fat Lady Is Singing: France’s Economy Can’t Create Jobs Unless It Becomes More Like Britain.”, <http://www.time.com/time/europe/>
- Le Monde (2005), “Le modèle social français est à bout de souffle”, le 2, Juin.
- Lindbeck, Assar and Dennis Snower (2002), *The Insider–Outsider Theory: A Survey*, IZA Discussion Paper, No. 534.
- Mazier, Jacques, and Maurice Basle, Jean–François Vidal (1993), *Quand les crises durent . . .*, Economica.
- OECD (2005), *Economic Survey of France*.
- Sapir, André (2005), “Globalis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Background Document for the Presentation at ECOFIN Informal Meeting in Manchester, BRUEGEL.
- Schmidt, Vivien A. (2003), “French Capitalism Transformed, Yet Still a Third Variety of Capitalism”, *Economy and Society*, vol. 32, no. 4.
- Smith, Timothy B. (2004), *France in Crisis: Welfare, Inequality, and Globalization since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